

보도설명자료

('22. 1. 1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,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,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
(1.11일 한겨레 「‘재생에너지 상향’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 내용

- ☐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이 필요하다는 환경부·탄녹위 의견을 묵살
- ☐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은 원전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 희생하는 선택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,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음
 - '21년 10월 마련된 '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(Top-down)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수치임
 - 지난 정부('17~'21년) 5년 동안,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.5GW 증가하였는데, 10차 전기본상 '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.6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.3GW 증가가 필요
 -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,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- 재생e 비중이 높은 국가의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으며, 국내 태양광 발전 비중은 5.0%(’22.上 기준)는 타 주요국* 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

* 중국 3.6%, 미국 3.2%, 인도 3.9%, 러시아 0.2%, 일본 8.4%, 캐나다 0.7%, 프랑스 2.6%, 사우디 0.1%, 멕시코 3.4%, 영국 4.3%, 대만 1.1%(’20년 기준)

- **현행** 입지규제, 주민수용성, 계통상황 등 **재생에너지 보급여건**을 고려할 때 **21.6%도 도전적**이며 **향후** 규제 개선,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,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**제도 개선** 노력을 통해 **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**임
- 10차 전기본의 **신재생 비중**은 9차 전기본 대비 증가한 것이며, **재생e가 주요한 발전원**으로서 역할하도록 전기본 최초로 **재생e 백업설비 확보방안**을 제시하고, **전력계통 확대방안**을 포함하였음
- 산업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**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**을 환경부, 탄녹위 등에 설명하였고,
 - 향후 수립 예정인 **2030 NDC 수정안**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, 합리성,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
- 한편, **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**한 것이 **원전**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**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**된 것임
 - **재생에너지 목표 비중**은 사업자들의 발전허가 등 계획조사에 기반 (Bottom-up)한 보급추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임
 - **원전 활용은 에너지안보 강화**를 위해 「**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**」과 한수원 의향에 따라 신한울 #3·4 건설재개 및 계속운전을 반영하였음
 - 원전은 전력을 안정적, 비용-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

※ 문의 :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(044-203-3880)
이디도 서기관(044-203-3886)